

대통령 한마디에... '제주항공 참사' 수사 속도

경찰특수단, 국토부 압수수색...피의자 4명 자료 확보 입건자 총 64명...유가족協 “진실 밝히는 전환점 되길”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책임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지시하면서 변화된 모습이다.

15일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에 따르면 수사관 20명을 파견해 지난 13일 오전 8시40분부터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수단이 국토부를 압수수색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참사 당시 국토부가 항공 안전 규제와 감독을 담당한 주무 부처였던 만큼, 사고 대응 과정과 관련한 자

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상은 사고 당시 국토부 항공위성정책 과 소속 2명과 공항운영과 소속 2명 등 피의자 4명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지시한 직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사고 초기 단계에서 유해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이유와 이후 1년 넘게 방치된 배경을 면밀히 확인하라”며 전면적인 조사 지시를 내렸다.

또 사고 책임이 드러난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

서 참사 발생 1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고 조사 역시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질 것을 주문했다.

다만 특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이 유해 수습 문제와는 별개의 수사로,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진행 중인 수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1월27일 전남경찰청에 있던 여객기 참사 수사본부 수사가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국가 수사본부 직속으로 특수단을 꾸려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달 12일 부산지방항공청과 시공 관련 업체 등 2곳을 압수수색해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탁(로컬라이저 구조물) 설계·시공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특수단의 추가 조사로 13일 현재 수사 받는 입건자는 45명에서 64명으로 늘었다.

이중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이번 사건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29 무안항공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환영하며, 엄중한 문책 약속이 끝까지 실현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참사 수습 실패·1년 3개월 간의 유해 방치 △항공청조사과조사위원회(항철위)의 두 차례 참사 현장 훼손·유해 은닉 △둔탁 규정 위반 사실 부정·진상 규명 지연 등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주장했다. 여기에 △항철위의 전면 쇄신 △

정부 추경 예산에 특별예산 편성 △구체적인 유해 수습·희생자 예우안 마련 등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지난달 12일부터 참사 잔해물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3일 조사 과정에서 희생 유해로 추정되는 치아 1개, 미세 뼈 30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유류품 16류음과 휴대폰 1개도 회수됐다. 이날까지 재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유해는 총 64점에 달한다.

이중 유해 9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식 결과 희생자 7명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휴대전화 5점을 포함해 총 유류품 707류음 등이 새로 발견됐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맑음	06:42	달림	05:07
맑음	18:40	달림	15:45



광주	☀️	2~15
목포	☀️	2~10
여수	☀️	5~13
순천	☀️	2~15
구례	☀️	1~17
광주	☀️	0~13
임도	☀️	2~14
목신도	☀️	4~9
진남	☀️	1~14
진도	☀️	2~11

목포	밀물(고)	12:48 / --:--
	썰물(저)	05:37 / 18:24
여수	밀물(고)	08:04 / 19:57
	썰물(저)	01:21 / 14:08

검찰 비공식 브리핑 ‘차장검사 티타임’ 부활 광주지검 오늘 기자간담회 개최...6년여 만에 재개

검찰과 언론 간 비공식 브리핑으로 알려진 ‘차장검사 티타임’이 6년여 만에 광주지검에서 다시 열린다. 검찰 공보 방식 변화 속에서 수사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넓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는 16일 오후 3시 출입기자들과 티타임 형식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장검사 티타임’은 수사를 총괄하는 차장검사가 기자들을 상대로 주요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수사 방향 등을 설명하는 비공식 브리핑이다. 과거 각 지방검찰청에서 정례적으로 열리며 사건의 맥락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19년 피의자실 공표 논란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같은 해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

행하면서 검사와 기자 간 접촉이 제한됐고, 차장검사 티타임도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검찰 공보는 인권보호관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사건 처리 결과 위주의 제한적인 설명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공보 규정을 일부 개정해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차장검사가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2022년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티타임이 재개됐고 일부 검찰청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검의 티타임 재개 역시 이 같은 공보 환경 변화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티타임이 정례화될 경우 수사 상황을 보다 정확히 전달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동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발대식 13일 오후 광주 동구청 상황실에서 열린 제7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발대식 및 역량강화교육에서 임택 동구청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남구 진월동 송전탑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5월까지 이설 작업 마무리...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조성

광주 남구 진월동 다목적체육관 부지에 설치된 고압 송전탑이 17년 만에 철거된다. 오랜 기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했던 송전선로가 제2순환도로 맞은편에 설치된 신규 송전탑으로 이설되면 주민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15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남구 다목적체육관 송전탑 이설작업 주민설명회 및 안전지원제가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병내 남구청장과 이천 서씨 문중,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 관계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다목적체육관 내 송전탑에 서서 만든 송전탑으로 선로를 옮기는 마

지막 공정을 무사고로 진행되길 기원했다. 현재 송전탑 이설을 위한 공정률은 85% 수준으로, 한전은 16일부터 신규 송전탑으로 선로 이설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송전탑에서 제2순환도로 맞은편에 설치된 신규 송전탑까지 거리는 180m 정도로, 이 구간에 남아 있는 송전선로는 모두 지중화된다.

이번 이설은 지난 2009년 1월 진월동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광주시와 한전이 송전탑 이설을 합의한 지 17년 만이다. 이후 구정에서는 이설 터를 놓고 서씨 문중과 한전까지 3자간 협의를 통해 신규 부

지를 마련했다. 신규 송전탑 선로 이설 작업은 2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구형과 한전은 늦어도 5월말까지 선로 이설을 완료할 방침이며, 한전은 선로 이설 공정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기존 송전탑도 철거할 계획이다.

송전탑을 철거하면 429.7㎡(130평) 규모의 부지가 확보되며, 이곳에는 다목적체육관 이용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조성된다. 남구 관계자는 “토지 소유 문중과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덕분에 송전탑 이설 마지막 단계까지 올 수 있었다”며 “송전선로 이설이 완료되면 주민 생활 환경 개선과 함께 도시 미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마약 밀수·투약...음주사고 ‘술타기’ 30대 실형

해외에서 마약 켈리를 숨겨 들여와 섭취·판매하고, 교통사고 후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 타기’를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승현 재판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29)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7~8월 미국령 괌에서

‘대마 켈리’ 약 90개를 구입한 뒤 국내로 수입, 투약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켈리 형태로 위장한 마약을 자신의 항공기 수하물에 숨겨 들여왔다. 이들은 서울 등지에서 대마 켈리 일부를 판매했고, A씨는 일부를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또 A씨는 같은 해 7월12일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음주사고를 내자 인근 술집으로 도주, 위스키를 마시는 등 경찰 음주 측정방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순천 동천·신안 장도 습지보호지역 보전”

영산강청, 5년 보전계획 수립...총 331억 투입 사유지 매입·생태교란종 제거·차수벽 등 추진

전남 순천과 신안 지역 핵심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중장기 보전 로드맵이 마련됐다. 기후변화와 육화(陸化) 진행, 사유지 증가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5년간 3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체계적인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1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순천 동천하구와 신안 장도 산

습지를 대상으로 30여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에는 습지 현황과 위협 요인 분석, 기존 사업의 지속·보완 방안, 토지 매입 및 복원 계획 등이 담겼다.

이중 순천시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5.656km²)은 논습지로 지정된 보호지역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다. 수달, 삿,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흑두루미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2종을 포함해 총 543종의 야

생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산강청은 동천하구의 보전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태·습지 네트워크’로 설정하고 3개 분야 18개 세부 추진사업을 마련했다. 정밀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관리 등 ‘습지 보전 기본 사항’을 강화하고, 토지매수 우선순위 선정과 사유지 매입 등 보전 기반 확충에 나선다. 또 지역민 참여·교육을 통한 관리 인력 확충 방안도 포함했다.

특히 토지소유자의 매수 요청 증가와 동천하구 생태축 조성사업을 고려해 연간 약 13만㎡ 규모의 토지 매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순천 동천



신안 장도

지 동천하구에 투입될 예산은 총 317억 4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221억2200만원은 정밀조사 등 보전 기본사항에, 44억 2500만원은 보전·이용시설 설치에, 51억 9400만원은 보전·이용 관리에 각각 배정된다.

신안군 장도 산지습지(0.09km²)에 대한 별도 보전계획도 수립됐다. 장도는 도서지역에서 처음 확인된 산지습지로 철새

의 중간기착지 역할을 하는 생태계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가뭄 등 기후변화 영향으로 건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습지 면적은 4만8760㎡로 2011년 대비 690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부 구간에는 환상덩굴과 돼지풀 등 생태계교란 식물이 확산되며 육화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영산강청은 훼손·

오염 요인을 구분해 3개 분야 1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탐방로 구분 및 출입통제지역 설정, 훼손지 복원, 교란식물 제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연계 방안, 습지 토양 수분 함유량 유지를 위한 차수벽 설치 등이 포함됐다.

장도 산지습지에는 5년간 총 14억 3300만원이 투입된다. 보전 기본 사항에 8억3500만원, 보전·이용시설에 2억 6100만원, 보전·이용 관리에 3억3700만원이 중점 배정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용·관리 방안 수립과 자연생태·자연경관·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관리에 중점을 뒀다”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습지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